

평택을 5자·부산 북갑 3파전… 재보선 최대 변수는 ‘단일화’

평택을, 보수 야권 2명·범여권 3명
표 분산시 30% 이하도 당선 가능
부산 북갑, 보수 진영 단일화 압박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가운데 ‘단일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지역은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이다.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고,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 단일화 상황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7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해당 지역은 이병진 민주당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열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활동하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영입된 김 전 의원의 평택을 전략공천에 대해 “보수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로 봤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이 수도권에선 민주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에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5자 구도



하정우(왼쪽) 시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데미스 하서비스 구글 담당인 CEO 접견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로 치러진다. 일단 민주당에선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에선 유의동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여기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당 지역을 출마지로 정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2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일찌감치 활동하고 있었다. 보수 야권에선 후보가 2명, 범여권에선 후보가 3명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30% 이하를 받아도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범여권 단일화 논의의 과정

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던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조국 대표를 위한 ‘양보’는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진보당의 경우 울산시장 단일화 문제도 얽혀 있어 이 문제를 풀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단 김 전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단일화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제1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가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또 주목을 받는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은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이곳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영입해 공천할 방침이다. 하 수석은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하 수석이 출마하게 되면 북갑 보궐선거는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0년간 뒹아온 지역구다. 이때 문인진 2024년 총선 당시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전재수 후보만 민주당 소속으로 생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전 후보의 ‘개인기’로 당선된 것이니만큼, 하 수석이 나선다 해도 쉬운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박민식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정기 기생’, ‘침입자’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당 지도부에서 (후보) 단일화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노(N)입니다”라며 단일화에 강한 거부 의지를 드러냈다. 한 전 대표 역시 완주의

지가 강하다.

하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압박은 거세 질 전망이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북갑 거주민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서 하 수석(민주당 소속)이 35.5%, 한 전 대표(무소속)는 28.5%, 박 전 장관(국민의힘)은 26.0%를 기록했다.

하 수석은 아직 출마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출마 이후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라는 게 관건이다.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받던 한 전 대표가 박 전 장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단일화 압박은 무소속인 한 전 대표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p),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쌍방을 대북송금 놓고 與 “조작기소” vs 野 “이재명 관여” 민주당 김용 컷오프 “선거 고려한 결단”

국조특위, 김성태 출석 청문회 격돌
내일 회의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여야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건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남쪽 변호사 주리를 틀어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압박 조작 수사의 일종의 숙주가 된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성태 증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 검사실을 지칭하며) ‘더 이상은 거짓말하고 이야기할 게 없어. 거짓말은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 등을 면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 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을 뒤로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압박한다고 해서 제가 위축될 사람은 아니다”라며 “제가 족들, 동료들 1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됐다. 검찰이 어느 대기업을 수사하면서도 회사 내부자 열 몇 명을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가 하는 스마트폰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 이재명 지사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뽕 먹고 알 먹고’, 즉 후원자로 하겠다는 목적 때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와 통화했는지 묻는 질문을 이어가자 김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측 설득, 회유가 있었다. 누가 설득하고 회유했나”라고 거듭 물었다.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김 전 회장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텐데 의원까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제재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위증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당내 계파 갈등까지 치달았던 김용 전 민주당 부위원장 공천 문제가 ‘컷오프(공천 배제)’로 마무리된 가운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28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막판까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당의 전략 단위라든지 또 현재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일선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당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견을 좀 들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김 전 부위원장 공천이 가장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제게 의견을 보내왔다”며 “특히 수도권, 영남권 이런 쪽에서는 당에서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 정치적 지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행위들과 당이 공천하는 공적인 행동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의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野 “정부, 세금정책으로 국민 상대 실험”

금융·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부담은 급증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임차인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들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계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일반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가 띄는 듯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주거시장 경제는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